

주요국제문제분석



발간등록번호
11-1260101-000077-03

2011. 4. 7

외교안보연구원

No. 2011-08

3.11 일본 대지진 사태의 대내외적 영향 및 전망

교 수 조 양 현

1. 3.11 대지진의 충격

가. 3.11 사태의 대내외적 파급효과

- 지난 3월 11일 일본 동북지역 앞바다에서 발생한 대지진이 쓰나미와 원전 사고를 동반한 일련의 사태를 초래하였던 바, 이는 전후 일본이 겪은 최대의 재난으로 기록됨.
 - 리히터 규모 9.0의 강진 및 두 차례의 거대한 쓰나미에 의해 후쿠시마 제1원전의 전원 공급이 차단되고 폭발함으로써 막대한 인명 및 인프라, 산업시설 피해는 물론, 동북지역과 일부 관동지역을 중심으로 생산기능 마비와 방사능 위기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함.
- 3.11 대지진 사태는 일본의 정치, 경제, 사회는 물론 한·일 관계 및 국제사회에 막대한 충격과 영향을 미치고 있음.
 - 1854년 안세이(安政) 대지진이 막부의 종말을, 1923년 관동 대지진이 군국주의의 발호를, 1995년 한신 대지진이 전후 경제부흥기의 종말을 가져왔다는 시각이 있는 바, 금번 대지진의 대내외적 파급효과는 무엇이며 우리에게 요구되는 대응은 어떤 것인지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목 차>

1. 3.11 대지진의 충격
2. 일본 국내의 영향 및 전망
3. 대외적 영향 및 함의
4. 고려사항

경제 및
산업 부문에서
대지진에 의해
약 16~25조 엔의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

나. 피해 현황

- 이번 지진은 일본 동북지역 특히, 이와테(岩手), 미야기(宮城), 후쿠시마(福島)의 3개 현에 걸쳐 피해가 집중되었으며, 전후 최대의 인적 피해가 발생함.
 - 일본 정부 공식 집계에 따르면, 3월 31일 현재 이번 사태로 인한 사망자 수는 1만 1,417명, 실종자 수는 1만 6,273명에 이룸. (1995년 한신 대지진 당시 사망자 수는 6,434명)
 - 총 14만 6,050채의 가옥이 파손되었고, 35만 명의 이재민이 피난소 생활을 하며 생필품 및 긴급물자의 부족으로 큰 고통을 겪고 있음.
- 경제 및 산업 부문에서 대지진에 의해 약 16~25조 엔의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계되고(한신대지진의 경우는 약 10조 엔), 자동차, 전자, 정유, 철강업을 중심으로 생산시설 파손과 전력공급 차질에 따른 조업중단의 피해가 발생했으며, 그 회복에는 수년이 소요될 전망이다¹⁾.
 - 동북지역과 일부 관동지역에 입지해 있는 자동차, 전자, 정유, 철강 공장의 조업중단으로 부품조달 등의 문제가 일본 전역으로 확산됨.
 - 동북지역과 관동지역은 전력, 가스, 수도 공급이 원활하지 못한 상황이며, 가스와 수도 공급이 중단된 가구 수는 각각 45만 호, 100만 호에 이르고(3월 18일 기준), 동북지역 및 관동지역에서는 전력 부족으로 제한 송전을 시행 중임.

다. 원전 피해의 심각성

- 이번 3.11 대지진의 가장 큰 우려 중 하나는 후쿠시마 원전 사태가 아직 진행 중이며, 사고로 인한 피해지역의 확산과 사태가 장기화 되고 그 피해 수습에도 장기간이 소요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임.
 - 후쿠시마현 제1원전의 6기 중 1호기와 3호기의 수소 폭발에

1) 3.11 대지진의 피해규모에 대한 일본 정부의 분석에 대해서는 「東北地方太平洋沖地震のマクロ経済的影響の分析」, 内閣府 3月23日. (2011년 3월 30일 검색 <http://www5.cao.go.jp/keizai3/getsurei-s/1103.pdf>)

- 이어, 2호기가 노심노출 후 폭발하고, 4호기의 화재 등 사고가 잇따름.
- 방사능 물질을 포함한 수증기 유출 가능성이 보도된 후, 후쿠시마현 우유와 이바라키현 야채에서 식품위생 기준치를 초과하는 방사능 물질이 검출되었고, 도쿄와 이바라키현의 수도물에서도 안전기준치 이상의 방사능 물질이 검출됨.
 - 방사능 유출 문제는 일본 국내는 물론 국제적으로도 민감한 반응을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핵연료봉 손상, 방사능 오염수 유출 등에 의한 방사성 물질의 대량 유출 위험이 상존하는 바 사태가 악화될 경우에는 그 피해 규모가 상상을 초월할 것임.
 - 현재 후쿠시마 제1원전 제6기 사고로 반경 20km 이내 주민 대피, 30km 이내 주민 옥내 대피상황(필요시 자체적으로 대피)이나, 동북지역 및 수도권을 중심으로 동경전력과 정부의 대처 및 공식 발표를 불신하는 등 혼돈 상태임.
 - 미국을 비롯한 서방 및 국제사회로부터도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인한 방사성 오염물질에 대한 우려와 일본 당국의 대응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음.

2. 일본 국내의 영향 및 전망

가. 장기적 경기 부양 효과

- 3.11 대지진으로 인한 원전 마비, 폭넓은 피해지역, 막대한 재정적자 등을 감안할 때, 일본 경제는 생산 감소, 금융시장의 불안정성 증가 등으로 장기침체가 심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있음.
 - ‘잃어버린 20년’이라는 장기침체 속에서 대지진 및 원전 사고는 생산 활동의 감소, 가계소비 및 기업의 설비투자 감소를 초래할 것임.
 - 일본 정부는 향후 3년간 피해복구 비용으로 25조 엔이 소용될 것이라고 추산했지만, 국가부채 누적액이 GDP의 두 배를 넘는 상황에서 그 재원 확보가 쉽지 않을 것임(2011년도 정부예산안 92조 엔 중 44조 엔이 부채).

방사능 오염수
유출 등
방사성 물질의
대량 유출 위험이
상존하여...

- 반면 장기적으로 볼 때 자연재해가 오히려 경제성장을 촉진한다는 과거의 경험에 근거하여 경제성장률이 크게 하락하지 않고, 한신 대지진 때처럼 대규모 재건 특수로 인해 수년 후에는 일본의 경기가 반등할 것이라는 낙관적 전망도 있음.
 - 선진국의 경우 자연재해가 단기적으로 물질·인적 손실을 초래하지만, 결국은 인프라 건설을 촉진해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 사례가 많았음.
 - 이번 피해가 집중된 상기 3개 현은 정보기술 산업과 농림업이 주력 산업이고 한신대지진이 발생했던 고베(神戸)와 비교해서 인구밀도나 산업비중이 낮음(일본 전체 경제에서 3개 현이 차지하는 생산액 비중은 4%에 불과).
- 따라서 일본 경제는 단기적으로는 생산차질로 인한 경기하강이 불가피하겠지만, 2012년 이후에는 완만한 경기회복이 가능할 것이라는 조심스런 전망이 가능함²⁾.
 - 일본의 금융자산 규모, 인적자원의 우수성, 외환보유고 등을 고려할 때, 대규모 복구사업에 따른 고용 및 수요 창출을 통해 대지진의 피해를 상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단기적으로는
경기하강이
불가피하겠지만,
2012년 이후에는
완만한 경기회복이
가능할 것이라는
조심스러운 전망...

나. 사회 전반의 보수화 가속

- 대지진의 충격이 일본 사회에 위기의식을 확대하여 결과적으로 전후 구축된 ‘일본형 시스템’의 개혁을 유도할 것이라는 시각이 있음.
 - 이번 재난을 계기로 전후 시스템의 모순이 드러났으며, 그 과정은 일본 사회 전 부문에 파급됨(지역 간 격차 문제, 매뉴얼 행정, 종적 분할 행정(縦割り行政)의 폐해, 정부의 위기관리 능력 부족 등).
 - 전통적으로 일본 사회는 내부로부터의 자발적 개혁이 아닌 ‘흑선(黒線),’ 패전 등 외부로부터의 충격을 통해 대변혁을 이루어 왔던 바, 금번 재해는 일종의 ‘외압’ 효과를 발휘하여 일본 사회의 체질 변화를 가능하게 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임.

2)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일본 대지진의 경제적 영향과 시사점』 11:7 (2011. 3. 30), 6쪽;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일본의 지진사태로 본 자연재해와 거시경제』 11:8 (2011. 3. 30), 5쪽.

- 반면 대지진의 충격에도 불구하고 일본 사회는 근본적 변화(개혁)보다 최소한의 조정(개선)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는 시각도 병존함.
 - 일본 사회는 변화에 완강하게 저항하는 속성이 강한 바, 당장은 현실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겠지만 지진 복구 사업이 궤도에 올라 안정이 찾아오면 일본 사회는 다시 ‘매뉴얼’ 중심의 경직된 체제로 돌아갈 것이라는 것임.
- 정치적 리더십의 부재, 의원내각제의 한계, 매뉴얼 중심의 경직성 등 전후 체제의 관성을 감안한다면, ‘제3의 개국’에 의한 국제화보다는 사회 전반의 보수화에 따른 폐쇄적인 국가가 될 가능성이 큼.
 - 지진의 피해 및 그 후유증으로 사회적 불만이 폭발하여 전후 초기와 같은 반전·반핵 운동이나 극우적 주장이 확산되고 정치 개혁이 탄력을 받을 수 있겠지만, 일본의 국제적 역할에 대한 관심이 줄고 국내 문제에 치중할 것으로 보임.
 - 외부 세계와의 경제적 의존 및 미국과의 안보관계 등을 고려할 때, 전전과 같은 국가주의나 전후의 평화주의보다는 내부 지향의 보통국가화 노선을 가속화할 가능성이 큼.

일본의
국제적
역할에 대한
관심이 줄고
국내 문제에
치중할 것으로
보여...

다. 정치적 혼란 속의 변화 모색

- 대지진은 정치적 결단 여하에 따라서는 복지 지출의 축소에 따른 재정지출의 정상화, 저출산·고령화에 대비한 이민 유입의 확대, 지역 경제의 활성화에 따른 국민경제의 건전화, 시장개방 및 산업 구조 효율화 등의 기회로 활용될 수 있음.
 - 이번 사태를 계기로 기존의 지방분권화된 국가시스템을 중앙 집권화하여 위기관리능력을 강화하자는 주장이 커지고 강력한 리더십에 대한 요구가 강해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정치 리더십의 부재, 의원내각제의 한계, 참의원 여소야대의 정당 구도의 불안정성 등을 감안한다면 본격적인 정치개혁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 당분간 일본 정국은 혼미한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정치활동이 긴급재난 대응에 매몰되어 뚜렷한 정치 변화를 찾아보기는 어려울 것임.

- 간 내각은 대지진 사태로 '3월 위기설'을 해소하고 2011년도 예산안을 성립시킬 수 있었지만, 참의원 여소야대 속에서 기타 예산관련 법안의 국회처리는 여전히 불확실함.
- 원전 사태의 대응 과정에서 정부의 위기관리능력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증폭되었던 바, 대지진 사태의 긴급 대응이 일단락되더라도 간 수상은 리더십 위기로부터 완전히 탈출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 민주당은 국민 여론의 지지가 하락한 상황에서 2013년까지는 중의원 해산 및 총선거 실시에는 신중한 입장인 바, 당분간 전격적인 정권교체는 기대하기 어려움.
 - 민주당은 오는 4월의 통일지방선거에서 패색이 짙으며, 만약 내각 교체가 있더라도 민주당 정권의 지지기반 침하로 인해 안정적인 정국 운영은 기대하기 곤란함.
 - 중장기적으로 대연립이나 정당간의 이합집산 등 정계재편의 움직임이 가속화될 수 있겠지만, 현 상황에서 정치적 변화의 방향성을 예단하기는 어려움.

3. 대외적 영향 및 함의

가. 국제경제의 불확실성 증가

- 대지진 사태가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평가가 우세하나, 원전의 추가 폭발 가능성과 방사능 유출 등으로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은 상황임.
 - 중동 및 북아프리카 정정불안, 유럽 재정위기, 글로벌 인플레이션 우려, 중국의 긴축전환 등과 함께 세계경제의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음.
 - 일본 엔화의 환율절상(엔고) 및 해외투자 회수, 석유·석탄 등 국제 원자재 및 곡물시장의 불안정 등의 부정적 영향이 우려되는 한편, 대규모 복구 사업에 의한 수요 촉발 효과도 기대됨.
- 한국 경제에 대해서는 중간재 공급차질 등 부정적 영향이 예상되나, 일본 상품에 대한 우리 상품의 대체 효과로 수출 증대 가능성도 상존함.

대지진 사태가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평가가 우세...

- 일본과 경쟁관계에 있는 반도체, 철강, 정유 분야는 반사이익이 기대 되나, 일본 경제의 침체로 인해 전반적인 수요가 둔화될 경우 그 반사이익은 제한적일 수 있음.

동북아
역내 세력 구도에서
중국의 우위가
견고해질 것이며,
미·일 동맹이
강화될 전망...

나. 일본의 대외 영향력 축소 및 동아시아 세력전이 가속화

- 이번 대지진 사태로 인한 재정적자의 심화, 국가 신용등급의 추가 하락 가능성 등으로 일본의 국제적 위상이 추락하고, 일본 정부는 당분간 국내 문제 해결에 치중함으로써 일본 사회의 대내 지향성이 심화될 것으로 보임.
 - 고이즈미 정권 이후 현저해진 일본 정치의 내부 지향적 모멘텀이 가속화할 것으로 보이며, 일본 정부는 당분간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경제동반자협정(EPA: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Trans-Pacific Partnership) 교섭 문제에 대해서도 소극적인 태도를 취할 것으로 예상됨.
- 그 결과 동북아 역내 세력 구도에서 중국의 우위가 견고해질 것이며, 일본 사회 내의 위기의식 확대로 미·일 동맹이 강화될 것임.
 - 오키나와 주둔 미군의 신속지원 활동으로 탈냉전 이후 미국이 강조해온 지역재해 구난을 위한 미군의 전방전개 능력의 필요성이 확인됨으로써, 오는 4월 워싱턴에서 개최될 미·일 간 ‘2+2 회의’에서 공동의 안보인식뿐 아니라 자연재해에 대한 미·일 협력의 중요성이 강조될 것으로 보임.

다. 원전 안전성 논의 촉발

- 일본 원전 사고는 기후변화 대응방안의 하나로 주목받아온 원전 르네상스에 큰 타격을 주고, 체르노빌 사건 이후 원전 산업이 ‘20년간의 빙하기’에 빠졌던 것처럼 국제 원전시장의 위축을 가져올 수 있음.
 - 중국, 독일, 스위스, 태국, 필리핀, 카자흐스탄 등은 원전 건설 계획안에 대한 재검토에 착수했으며, 각국에서 원전 반대 환경운동이 활발해질 것으로 보임.

- 그렇지만 원전을 대체할 수단이 제한적인 현 상황에서 원자력의 경제성 및 친환경성을 감안한다면, 원자력 산업이 일시적으로 발전 속도가 늦어지더라도 중장기적으로는 안정성 제고를 통해 다시 추진될 수 있을 것임.
 - 화석 연료에 의존하는 전통적 발전 방식에 대한 국제사회의 반감이 강하고 풍력, 태양광, 조력 등 신재생에너지는 아직 경제성이 낮아 원자력을 대체하기 어려운 바, 중장기적으로 원자력의 전망은 어둡지만은 않음.
 - 원전 위기시의 협력시스템 제도화, 국가 간 정보교환 등 국제적 원자력 안전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원자력 발전의 안정성·에너지 문제에 대한 대처 방안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질 것으로 예상됨.

원자력 발전의
안정성·에너지 문제에
대한 대처 방안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질 것...

4. 고려사항

가. 일본의 국제적 역할 유지 독려

- 일본의 대외 관여 축소의 결과, 지역질서 운영에 있어서 한국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증가하고 대중관계 설정에 있어서 한국의 전략적 입장이 난처해질 수 있는 바, 일본이 국제적 역할을 유지하도록 설득해야 함.
 - 시장경제와 민주주의 그리고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공유하는 한일 양국은 북한 문제, 중국의 부상, 지역적 경제협력, 대량 살상무기, 테러, 환경·에너지 문제, 세계 금융경제위기 등의 현안 대응에 있어서 공동의 이해관계에 있음.

나. 대일 인도 지원과 영토문제의 분리 대응

- 한국 정부와 국민은 일본의 고통과 충격을 공유하고 사상자 및 이재민에 대한 위로 및 지원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여, 역사 인식과 독도문제를 둘러싼 갈등과 마찰의 악순환을 벗어나 전략적 협력관계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도모하는 계기로 삼아야 함.

- 일본 사회의 보수화 및 내부 지향을 배경으로 독도 관련 교과서 검정 문제가 한·일 협력의 구조적 장애요인으로 남을 가능성이 농후한 바, 독도를 실효지배하고 있는 한국으로서는 일본의 독도 분쟁화 전략에 말려들지 않으면서 우리의 독도 영유권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함.

재난관리와
원자력 안전
분야에 대한
동북아 및
동아시아 차원의
대응을 강화해야...

다. 원자력 안전 및 에너지 다자협력 강화

- 천재지변, 원전 사고 등 초대형 참사는 그 피해가 개별국가를 넘어서는 국제적 사안인 바, 재난관리와 원자력 안전 분야에 대한 공동 대처 및 협력·공조 시스템의 제도화 문제에 관한 동북아 및 동아시아 차원의 대응을 강화해야 함.
 - 한·중·일 정상회의, 아세안지역포럼(ARF: ASEAN Regional Forum), 동아시아정상회의(EAS: East Asia Summit) 등 역내 다자외교 무대에서 재난관리 및 원자력 안전에 대한 공조체제의 제도화 방안을 논의해야 함.
 - 각국의 원자력 정책이 재검토될 경우 화석연료 의존도가 증가하여 전세계적으로 석유 가스 확보 경쟁이 격화될 가능성이 있는 바, 한·중·일 3국간의 가스 수입 공조와 비상시 비축유 공동사용 등 에너지 협력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라. 원전 사태 관련 한·일 간 정보 공유 및 협력 확대

- 일본 원전 사태의 장기화에 따라 대기 및 해양 오염도가 증가하고 최근 대량의 방사능 물질 오염수의 해양 방출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원전 사태의 현황 및 수습 대책에 관한 한·일 간 실시간 정보 공유가 긴요함.
 - 국경을 넘는 대형 재난의 경우, 그 발생 및 사후 수습 조치 여하에 따라 주변국은 직접·간접적 피해를 받게 되는 바, 이러한 ‘국제 재난’ 발생시 해당국은 주변국과 실시간 정보를 공유하고 협조를 구하는 책임있는 모습을 보여야 함.

마. 재해 안전대책 점검강화

- 금번 일본 사태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지진 등 자연재해 대비책 및 원전의 안전성을 재점검하고, 재해 발생시 피해 최소화를 위한 효과적인 위기관리체제의 확립이 필요함.
 - 일본 방사성 물질의 국내 유입에 대비하여 대기 및 해양에 대한 안전진단체제 및 수입품의 안전성 검사를 강화하고, 한국형 원전의 안전성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통해 국민의 불안감이나 사회적 동요를 불식시켜야함.

2011. 4. 1

토론: 연구부장 윤덕민
연구부장 황순택
편집: 연구원 김혜림